

# 중앙·지방 손잡고 중대재해 사각지대 줄인다

## 광주경총, 첫 협력모델 '지중해 프로젝트' 추진 30인 미만 사업장·취약 현장 안전관리 강화 중점 평동산단 등에 예방 혁신센터 설치 운영 제안도

광주지역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공식 협력 모델이 가동된다. 특히 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평동산단단지 등 지역 내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 혁신센터' 설치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첫 전국 단위 협력 모델인 '지중해 프로젝트(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를 본격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지중해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추진하는 2년간의 시범사업

이다.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과 산업안전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제도와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현장 밀착 집행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로 운영된다. 핵심 대상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영세 제조·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다. 기존 산업안전 정책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했던 현장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지원, 사고 발생 재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광주경총은 중대재해가 대기업보다 안

전관리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하청·지역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지도·점검만으로는 전국의 영세 사업장을 모두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자체는 지역 산업 구조와 사업장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그동안 산업안전·보건 분야 개입 권한과 재원이 부족해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지중해 프로젝트는 중앙은 제도와 재정을 담당하고 지방은 현장 집행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눠 중앙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던 말단 현장까지 정책 효과를 전파하는 통로를 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이번 사업이 중앙과 지방 거

버너스 측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공식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향후 산업안전 정책의 새로운 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성과 있는 지자체 모델을 향후 중앙정부 기존 사업 개편이나 확대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 우수사례가 국가 정책 표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중해 프로젝트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밀폐공간 작업, 추락 등 사고 다발 분야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다. 공동관리자 운영과 위험성 평가, 기술지도, 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영세 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광주경총은 이러한 지원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경우 실제 사고 건수와 사망자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지중해 프로젝트는 소규모·취약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를 눈에 띄게 줄이고 지역 단위 상시 예방 시스템과 중앙·지방 협력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평동산단단지 등에 중대재해 예방 혁신센터를 구축·운영한다면 현장 밀착형 예방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한국전력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전력공사(EVN) 산하 발전회사인 EVNGENCO3와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플랫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 한전, AI 기반 발전소 운영 플랫폼 첫 해외 수출

### 베트남에 3개 호기 공급 계약 231만 달러 규모 데이터 추출 속도 빠르고 별도 구성 비용 없어

한국전력공사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발전소 운영 플랫폼의 첫 해외 기술사업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전력 e플랫폼 시장 진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한국전력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전력공사(EVN) 산하 발전회사인 EVNGENCO3와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플랫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베트남 푸미(Phu My 1) 발전소와 빈탄(Vinh Tan 2) 발전소 등 총 3개 호기(2.2GW)에 IDPP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31만 달러이며 사업 기간은 16개월이다. IDPP 플랫폼은 한전이 전력그룹사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개발한 디지털 발전소 운영 솔루션이다. 초대용량 발전소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하

고 AI 분석을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는 유연 운영을 지원해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글로벌 상용 솔루션보다 데이터 추출 속도가 빠르고,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해 추가할 수 있어 별도의 데이터 구성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설비 확대나 신규 AI 기능 도입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경제성과 확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한전은 이번 3개 호기 구축을 시작으로 EVNGENCO3와 협력을 확대해 총 14개 호기(6.3GW)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향후 베트남 전역 68개 발전소로 확대될 경우 4760만 달러 규모의 사업 기회가 예상되며 동남아 전체 시장으로 확장 시 약 1억4000만 달러의 중장기 매출 잠재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측의 경제적 편익도 상당할 것

으로 기대된다. 이번 3개 호기에 플랫폼을 적용할 경우 연료비와 대체전력 구입비, 유지·보수(O&M)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연간 약 440만 달러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베트남 전역 68개 호기로 확대 적용할 경우 연간 약 6600만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은 국내 발전소에도 IDPP 플랫폼 확대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발전 자회사 발전소 28호기에 도입된 노후 외산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IDPP로 전환해 전체 171호기로 확대할 경우 1430억원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에너지 신기술·신사업 해외 수출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진입장벽이 높은 글로벌 e플랫폼 시장을 국내 기술력으로 개척하고, 한전KDN과 오션정보기술 등 국내 중소기업과 구축한 동반성장 모델을 해외에서 입증했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중기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추진 5인 이상·50% 이상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40개 조합 지원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조성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동조합·조합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지원 대상은 전체 조합원 5인 이상,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연합회·자율상관조합 등이다. 사업은 이들이 추진하는 △공공생산·공동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서 '혁신성장' 단계를 추가(최대 지원 한도 3억원)해 '성장·도약·혁신성장'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전체적으로 40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해 조합당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차등 지

원한다. 선정 과정에선 사회적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대·협력 구조를 강화한 조합을 우대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가 동일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위치한 협동조합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김경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개별 소상공인은 홀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gwangnam.co.kr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 중기부,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 168억5000만원 투입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을 돕고자 168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2026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대기업 등 산업 선도기업의 해외 자원(인프라)과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해 역량은 있지만 해외 자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

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주관기업 공모를 거쳐 25개 과제를 올해 1차 지원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번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본격 시작했다. 올해 동반진출 지원은 169억원 규모로 약 50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2차 과제 모집은 오는 5월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대기업 등 주관기업 간 협업과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유통이나 플랫폼, 방송사 등 2개 이상의 주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되며 주관기업별 전문성을 발휘해 단계별로 협업하게 된다. 중장기 프로젝트형 동반진출 지원을 확

대한다. 중장기 프로젝트는 참여 중소기업당 지원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늘리고, 제3국으로의 생산거점 이전(P턴) 유형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동반진출 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9일부터 대중기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상생누리'에서 주관기업의 모집공고를 연중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동반진출 지원은 대기업의 역량을 중소기업과 결합해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했다"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기업 등 선도기업과의 사업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gwangnam.co.kr